

2012. 9. 24 Vol. 39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확정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민관공동 대응 방안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 경제동향

기획 정보

가계 및 농가부채 실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지자체 부채 추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확정

※ 본 자료는 9월 19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확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금번 세부 이행계획은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간 체결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포함**

※ 다섯가지 사항: ①경제사업활성화 역점 추진, ②사업구조개편 목적 및 경제사업활성화 취지에 부합토록 경영 효율화, ③자체자본 확충, ④조합 지원사업 개선, ⑤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 세부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담고 있음.

- **중앙회(교육지원)**는 **조합 및 조합원 지도·지원에 집중**
- **농협경제**는 4.96조 원 신규투자, 판매조직 마련으로 **‘20년까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 **농협금융**은 전문성 강화 등으로 **협동조합 수익 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농업인의 권익 대변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

□ 주요 내용

1. 경제사업활성화 역점 추진

- **‘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적정가격에 책임 판매**하고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 정착
- 단계적으로(‘17.2월까지) **농산물 전문판매조직으로 개편**
- 경제에 충분한 자본금(0.27조 원→5.95조 원) 배정하여 안정적 사업기반 만들고, 자본금을 바탕으로 **‘20년까지 4.96조원(36개 사업) 신규투자**

- 분야별 투자 계획은 ①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지분투자 등 산지유통 기반 구축 4,447억 원(총 투자액 대비 9%), ② 농자재센터·종돈장 등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6,636억 원(13.4%), ③ 청과 도매물류센터·축산물종합물류센터·양곡유통센터 등 도매역량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1조 7,626억 원(35.5%), ④ 쌀가공·가정편의식·육가공 등 국산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7,474억 원(15.1%), ⑤ 농·축산물 전문판매장 등 소비지 판매역량 강화 및 소비자 편익증진 1조 194억 원(20.6%)임.
- '12~'13년에 총 1조 520억 원을 투자하여 청과도매물류센터,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및 도축시설 확대 등 판매 인프라 확충에 중점

2. 경영 효율화

○ 임원 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 임원 성과급 지급 차등 폭 확대(기본급의 △20~60% → △30~80%) 및 중앙회장 성과급 폐지('12)
- 농축경 대표 성과평가 시 판매활성화 평가항목 신설('12)
- 사업부문별 특성 반영한 임원 성과평가방안 수립 및 지속 보완('13~)

○ 조직·인력 운용 효율화

- (교육지원) 농정기능 강화 및 조직 슬림화 지속 추진, 조합 지원기능 강화위한 지역조직 재편('13)
- (경제) 자회사 설립 T/F 설치('13) 등 경제사업 이관 철저('15.2월까지 판매·유통사업, '17.2월까지 나머지), 마케팅 조직으로 재편 지속 추진(지원조직 슬림화, 유사업무 통폐합, 판매역량 강화 등)
- (상호금융)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 추진('13)
- (농업금융) 지주체제 안착('12) → 수도권 채널확대, 농업·공공금융 조직 강화, 해외 진출 등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속 추진('13~)

○ 부문별 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추진 및 협동조합 이념 교육시스템 구축('13~)

- **중앙회 소매사업 및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 : 중앙회 소매 사업부문 자회사화('13) → 기존 4개 유통자회사와 통합('14~'15)

3. 자체자본 확충

- **이익잉여금 적립과 조합 출자를 통해 '17년까지 4조 원 자본 확충**

4. 조합지원사업 개선

- 자금지원심의회에 외부인사 포함, 지원내역 공개 등을 통해 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12)
- **판매활성화사업 지원규모 확대**('12) : 2.39조 원 → 2.9조 원(0.51조 원 증가)
- 경제사업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자금 지원체계 개선 추진**('13~)
 - 경제사업 관련자금은 경제부문에서 별도 운용, 사업실적과 연계한 자금지원, 중복지원 방지, 종합 지원방식 도입 등
- 경제사업 이관 완료 후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지주 이관방안 마련**('17)

5. 독립사업부제 강화

- **사업부문별 인력·예산 등 분리 운영**
 - 부문별 구분채용 등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및 부문별 회계 분리 및 별도 자본 배분('12)
 - 책임경영 강화위해 내부 투자 손익법 도입('13~)
 - 예산 편성 권한 분리 : (분리 전)교육지원에서 편성·통제 → ('12) 부문별로 편성권한 이관(유보예산 제외) → ('13~)유보예산 권한 이관
- **사업부문별 소이사회 철저 운영**
 - 농축경 소이사회 기능 강화('12) : 고정투자 의결범위 확대(500억 원 → 700억 원), 조직개편·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결항목 추가
 - 경제사업 이관에 대비한 소이사회 기능전환 계획 마련('15)

※ 본 자료는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제 곡물가 상승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우리 기업이 **'21년까지 해외 곡물을 700만 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 강화
- 사료구매자금 확대지원 등 **농가와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사육두수 감축 등 **자구노력도 강구**
- **국내 생산과 해외 비축 확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로 국제 곡물가 급등의 충격을 최소화

□ 주요 내용

1. 해외 곡물도입 기반 강화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및 확보 곡물 최대한 국내반입 추진**
 -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 다각화**, **전문인력 육성**, 해외농장에 필요한 **SOC(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구축에 ODA 지원** 등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개발 투자 촉진 여건 조성**
 - 곡물 **국내 반입이 용이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우대**
 - ※ TRQ물량 일부를 해외농업개발 곡물의 실수요업체에 배정, 농장개발과 유통시설 설치 뿐 아니라 곡물매입 등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미국 곡물유통회사(AGC) 외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방식 다각화**
 - 독자적으로 **미국에 곡물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 사용계약 등을 통한 **미국 유통망 확보 추진**

- 유럽계 메이저를 통해 연간 100만 톤 규모 곡물의 안정적 공급

2. 사료가격 안정 및 사육노력 강화

-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량 확대**, 수입곡물 사료 50만 톤 이상 대체
 - '13년에 조사료 급여비중 확대(45%→ 50)로 **연간 50만 톤 배합사료 절감**
- 농가가 **소와 돼지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 사육비용 절감
 - (**한우**) 금년 하반기 중 **암소 13만 마리**(정부 8, 농협 5) **이상 감축**, 수급 상황에 따라 한우협회 주관으로 5만 마리 추가 감축
 - (**돼지**) **저능력 모돈 8만 마리**, 불량 자돈 10만 마리 선발 도태
- **사료 외상구입을 현금구입으로 전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3. 주요 식용 곡물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

- **식용콩은 수입가격 상승요인 최소화 및 국내생산 확대**
 - **식용 수입콩의 수입원가 인하 추진**
 - ※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 관세(현행 TRQ 5%) 인하 및 국영무역 도입물량 판매가격(현행 1,020원/kg) 인하 검토
 - ※ 국영무역 식용 수입콩의 상시 비축량을 확대('12년 47.5천 톤 → '13년 71천 톤)
 - **'15년 식용콩 자급률 40%(18만 톤) 달성여건 마련**
- **식용밀의 수입원가 부담경감**, 쌀과 우리밀로 **수입밀 70만 톤 대체**('15년)
 - 제분용 수입밀(기본 1.8%)의 할당관세를 0%로 지속 운용
 - 쌀 공급여력을 확충하여 주식의 안정공급 및 **'15년 수입밀 50만 톤 대체(당초 목표 40만 톤) 추진**
 - ※ 쌀 산업 5개년 계획('10년) 보완, '15년 당초(415만 톤)보다 안정 생산 도모
 - ※ 재고쌀을 쌀가루용으로 저가공급(355원/kg) 지속 추진(당초 '10~'12년)
 - 국산밀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여 내년 생산을 확대(42천 톤→75천 톤)하고,

‘15년 10% 자급하여 수입밀 20만 톤 대체 추진

- 식량위기 시 대응여력 확충 위해 **밀·콩·옥수수의 해외비축 추진**
(‘14년)
 - 비축 규모(사료용)는 **FAO의 흉작대비 5% 기준에 따라 50만 톤 수준**

4. 국제식량위기 해소 국제공조 강화 추진

- G20,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공론화에 성공**
 -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 제한, 수출제한 금지 등 촉구
 - ※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 관세(현행 TRQ 5%) 인하 및 국영무역 도입물량
- 향후, 지금까지의 **국제공조가 정책화**되도록 APEC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적극 추진
 -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정보그룹회의(10.2일), FAO회의(10.15일) 등에서 **국제공조 재강조**
 - **RRF(긴급대응포럼) 조기 개최**를 위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 등과 긴밀히 협력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 경제동향

※ 본 자료는 9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내수 및 대외거래

- 7월중 소매판매가는 전월대비 3.4% 증가하였으나 폭염 및 IT 신제품 출시 등 일시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
 - ※ 7월중 고온현상으로 냉방기 등 가전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갤럭시S3(7.9일 출시) 등 휴대폰 판매도 호조
 - 설비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설비투자지수: 전월대비 -5.9% → 2.5%)
 - 건설투자: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는 움직임(건설기성액: 전월대비 -2.8% → 6.8%)
- 8월중 수출(430억 달러)은 글로벌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였으며, 일평균으로는 17.9억 달러 기록

□ 생산활동 및 고용

- 7월중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 담배 등은 늘었으나 반도체·부품, 자동차 등이 줄면서 전월대비 1.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나 전월대비 0.7% 증가
- 8월중 고용은 취업자수(계절조정)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만 명 가량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
 -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월과 동일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하여 전월(7월 1.5%)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
 - 전월대비로는 석유류(7월 -4.1%→ 8월1.8%) 및 농산물(-2.2% →4.4%)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가공식품가격의 오름폭이 확대(0.1% → 0.4%)되면서 0.4% 상승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전월대비 0.0% → 0.2%)
-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락폭 확대(전월대비, 7월 -0.1% → 8월 -0.2%)
 - 전세가격은 예년(2002~11년 8월 평균: 0.4%)에 비해 상승폭 축소(전월 대비, 0.2% → 0.1%)

□ 종합의견

-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하방리스크가 우세
 -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진 심화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둔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농산물가격 불안 등 공급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
 -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기획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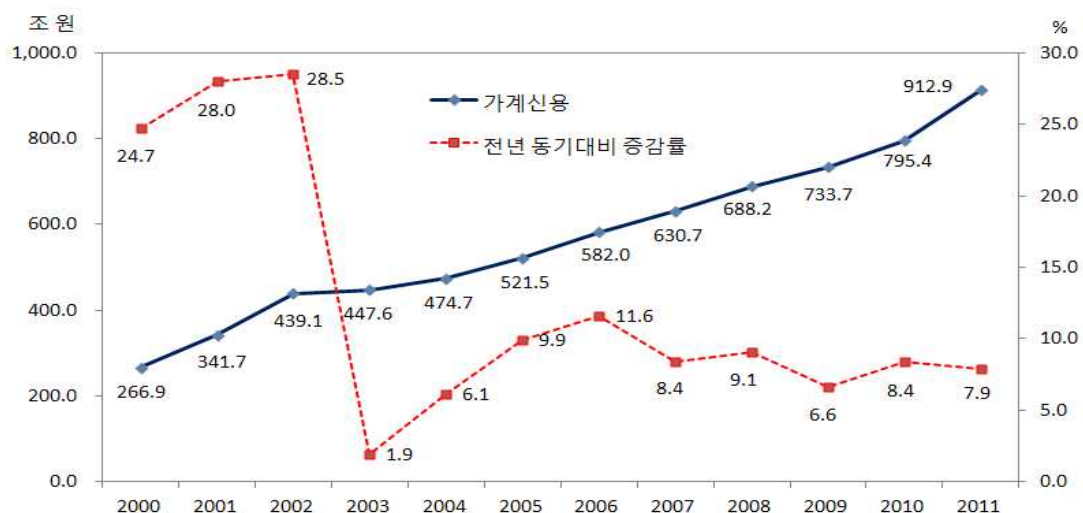
가계 및 농가부채 실태

※ 본 자료는 Agendanet의 한국 가계부채 관련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의 “농가부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내 가계부채 실태

-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 267조 원에서 2002년 439조 원으로 1.6배 증가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해 시중유동성이 증가했고 기업대출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임.
- 이후 가계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8%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913조 원에 달함.**
 - ※ 가계부채 추이(조 원): ('00년) 266.9 → ('05년) 521.5 → ('11년) 912.9(잠정)
 - '11년 8월 이후 **금융 감독당국이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 빚 증가세는 **다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음.
 - ※ 2금융권 대출 증가액(12조 9,000억 원)이 은행 대출 증가액(6조 2,000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섬.

<연도별 가계신용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각 년도

○ 한편, **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평균 (73%)을 크게 상회

- 이는 그리스 보다 20%포인트 높고,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

<OECD 회원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0>

구분	내용
50% 미만	체코(30%), 슬로바니아·폴란드(31%), 슬로바키아(36%), 헝가리(40%), 이탈리아(42%), 이스라엘(48%)
50% 이상 ~ 80% 미만	룩셈부르크(52%), 프랑스(54%), 벨기에(55%), 에스토니아(56%), 오스트리아(57%), 그리스(61%), 독일·일본·핀란드(62%)
80% 이상 ~100% 미만	한국(81%) , 스웨덴(82%), 스페인(85%), 노르웨이(86%), 미국·캐나다(92%), 포르투갈(95%), 뉴질랜드(96%), 영국(99%)
100% 이상	호주(105%), 아일랜드(119%), 스위스(123%), 네덜란드(127%), 덴마크(141%)

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터키의 경우 2009년 수치임.
 자료: Agendanet, “한국과 OECD 회원국 가계부채 비율 분석”, 2012.

○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2012.5)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 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

-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고 지적

<한국과 PIIGS 5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가계 부채비율	154.9	154.1	80.1	228.7	97.8	140.5

자료: Agendanet, “한국과 OECD 회원국 가계부채 비율 분석”, 2012.

□ 가계부채 증가 요인¹⁾

-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해 대출 부담이 가중
 - '11년 3월 10일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
 - ※ 시장금리 상승세 속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
 -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회복에 악영향 초래
 - ※ 시장금리 상승세 속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
 - ※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를 시 금융권에서는 자칫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
- (주가 조정) 주가하락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줄게 되면 가계부채 상승 위험이 증가
 - 다행히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간 부진했던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상승세가 확대, 가계 금융자산이 증가되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희석
-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빚의 60% 가량이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중단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가계의 손실을 가중
 -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
 - 가계의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부채 부문이 취약
- (신용카드 사용 급증)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과소비 확대로 카드 돌려막기 등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가계부채가 가중

1) 이 부분은 “한국의 가계부채 가중요인 분석”, Agendanet, 2011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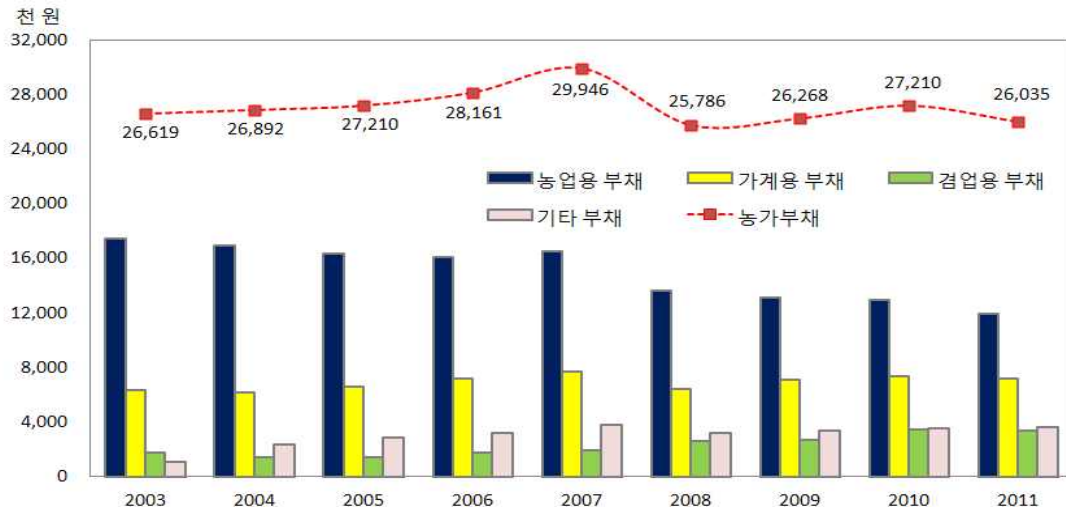
□ 농가부채 실태

○ 농업부문의 시장개방과 더불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농가부채**는 **2003년 이후로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2003년 2,661만 9천 원에서 2011년에는 2,603만 5천 원으로 연평균('03년~'11년) 0.3%의 감소율을 나타냄.

※ 호당 평균 농가부채 추이(천 원): ('03) 26,619 → ('07) 29,946 → ('11) 26,035, 연평균 0.3% 감소

<농가부채 추이>



자료: 농림수산물통계, 2012.

○ **용도별 농가부채**를 살펴보면, **농업용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가계용 부채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겸업용 및 기타 부채가 증가**하였음.

※ 농업용부채 추이(천 원): ('03) 17,455 → ('07) 16,481 → ('11) 11,892, 연평균 4.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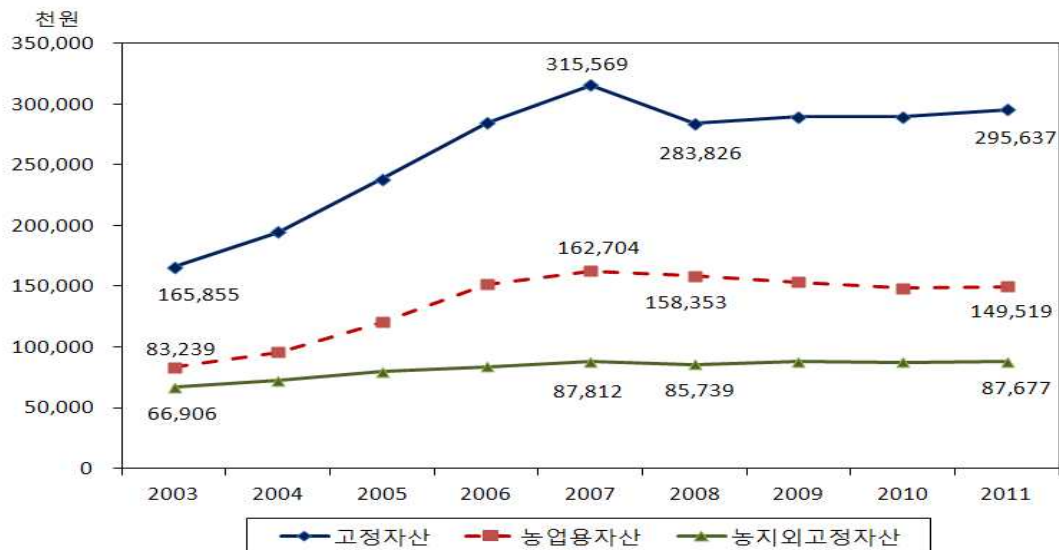
※ 가계용부채 추이(천 원): ('03) 6,344 → ('07) 7,725 → ('11) 7,156, 연평균 1.5% 증가

※ 겸업용부채 추이(천 원): ('03) 1,711 → ('07) 1,961 → ('11) 3,393, 연평균 8.9% 증가

※ 기타부채(천 원): ('03) 1,109 → ('07) 3,779 → ('11) 3,594, 연평균 15.8% 증가

- 한편, 농업투자의 확대 여부는 농지, 건물, 시설물 및 농기계, 대동물 등 고정자산의 변동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음. **농가의 고정자산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및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농지를 제외한 고정자산과 농업용자산 변화 추이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농업투자가 정체된 것은 농가교역조건과 수익성의 동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농가 고정자산 증가 추이>



주: 농식품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2011,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1

- 농업용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가의 고정자산 정체 현상과 연계하여 보면, **농가가 농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농업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효과²⁾를 도모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 농가의 재무구조 건전성 지표인 **자산부채비율 분석결과, 위험수준인 40%를 넘는 농가 비중이 3.6%, 30~40% 농가가 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레버리지 효과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 효과'라고도 함.

<부채규모별 자산부채비율 분포>

단위: %

구분	부채없음	3천 미만	3-5천	5천-1억	1억 이상	전 체
10% 미만	36.9	33.8	3.5	1.9	0.4	76.4
10-30%	0.0	4.6	3.7	5.0	4.0	17.2
30-40%	0.0	0.3	0.4	0.9	1.2	2.8
40-70%	0.0	0.3	0.3	0.3	1.3	2.3
70% 이상	0.0	0.0	0.2	0.3	0.8	1.3
전 체	36.9	38.9	8.0	8.4	7.7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원자료(2011) 분석결과

- **농가그룹별로 보면**, 영세고령농의 부채비율은 평균 3.3%에 불과하나 **전업규모농은 14.7%**로 높게 나타나 **젊고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투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특성별 평균 자산부채비율>

단위: %

구분		1ha 미만	1-3ha	3ha이상	전 체
65세 이상	65세 이상	3.3	2.5	5.5	5.5
	60-64세	5.2	6.5	10.0	6.9
50대 이하		11.1	9.9	14.7	11.7
전 체		5.7	5.6	11.5	6.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원자료(2011) 분석결과

- **전업규모농(3ha 이상, 60세 미만)의 자산부채비율**을 보면, **40% 이상인 농가 비중이 10.4%**로 높게 나타났으며, **30~40%인 농가 비중도 8.2%**로 나타남. 이는 **젊고 규모화된 농가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그룹임과 동시에 경영안정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전업규모농의 부채상환능력>

단위: %

구분	부채없음	1억 미만	1-3억	3-5억	5억 이상	전체
10% 미만	6.6	37.2	1.1	0.0	0.0	44.8
10-20%	0.0	14.2	5.5	1.1	0.0	20.8
20-30%	0.0	2.7	10.9	1.1	1.1	15.8
30-40%	0.0	3.3	2.7	1.6	0.5	8.2
40%이상	0.0	1.6	7.7	0.5	0.5	10.4
전체	6.6	59.0	27.9	4.4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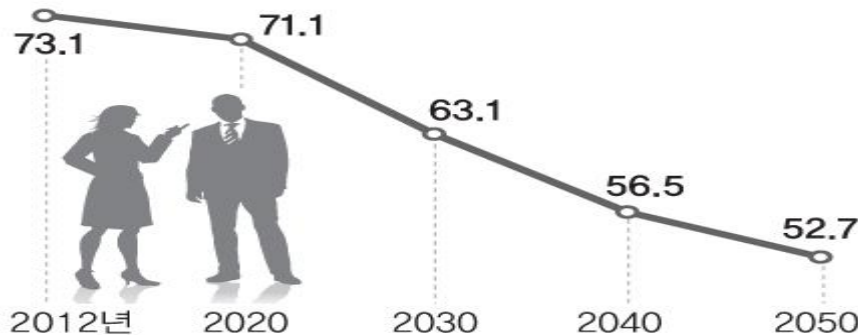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원자료(2011) 분석결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17일~9월 2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생산가능인구, 올해 쟁쟁찍고 '수직낙아'



-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3.1%를 기록하고 내년부터 2050년까지 20.4%포인트 하락하며, 특히 2020~2030년 사이 급격한 하락기를 맞으며 이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일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함께 떨어져 전체 경제가 저 성장하며,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 중장년층의 부양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돼 저축률과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설명.

자료 : 농민신문(2012.9.19).

□ 농가 인력난 숨통들까..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430명 추가 배정

- 농가수요에 비해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수가 턱없이 부족해 농촌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는 13일 ‘2012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추가 도입 계획’ 회의를 열고, 올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430명을 추가 배정하고 2013년 농업분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인원을 6,000명으로 확정, 이는 올해 4,500명보다 33.3% 증가한 수치임.

자료 : 농민신문(2012.9.17).

□ 농촌복지의 최첨단 정책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목표는 압격점…실적은 낙제점

- 읍·면에 유치원, 초·중학교를 최소 1개씩은 유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30분 안에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책은 시행초기 기대심이 컸지만,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에 따르면 **종합이행지수는 -12.583점으로 기준 달성지수(0점)를 한참 밑돌고** 있음. 특히 일상생활에 보다 필요한 10개 기초서비스 항목을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62.3** ▲**교육(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6.4** ▲**응급서비스 -2.5** ▲**복지(아동, 영·유아) -2.1** ▲**대중교통 -1.8** ▲**주거(주택, 난방, 상수도) -1.1**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에 미달. 이에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
자료 : 농민신문(2012.9.19).

□ 농식품부 · aT, “도매법인의 적극적 의지 · 정부 지원 필요”

-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7~1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참석자들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분임토의에서 정가·수의매매제가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와 함께 **정가·수의매매제를 본격 도입한 초기이니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지원책 마련을 주문**. 정가·수의매매제의 수수료와 관련해서, 인천구월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웅겸 주무관은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비용은 많이 들면서도 수수료가 경매 수수료(7%)보다 낮아 수입 저하를 우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홍 동부팜청과 부장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장외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제도가 정착되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에 따라 입장차를 보임.

자료 : 농민신문(2012.9.21).

□ “키울수록 적자” ...한우농가 울분 폭발

- 지난 12일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 한우인 총궐기 대회’에서 한우농가는 한우의 산지가격이 붕괴되면서 키울수록 적자만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을 주관부처인 농식품부가 방관만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 김남배 전국한우협회장은 “산지 암송아지의 평균가격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우시장에서는 60~70만 원에 송아지가 거래되고 있어 농가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들이 이같이 분노하는 것은 답답한 현실을 정부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상실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규탄에 참여한 한우농가는 **암소수매, 사료값 안정대책 마련, 송아지안정제 시행 등 한우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

자료 : 축산신문(2012.9.17).

□ 5% 브랜드 계란만 등급판정 특혜

- **계란등급판정사업**이 계란의 낮은 가격 소비재 농산물 특성에 따른 유통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5% 수준인 약 6억 개~7억 개 정도만이 등급판정**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등급판정을 받는 곳은 20만 수를 넘어서는 대규모 양계장과 CJ 등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일부 농장에 불과. 문제는 등급판정란과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계란의 품질차이는 없지만 가격차가 존재**하고 계란단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수만 개를 등급판정해 받는 수수료로는 판정사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현 유통구조, 등급판정 방식으로는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것에 있음. 이러한 불합리함 속에 일부 대기업 계란이 마치 자사 계란만이 1등급 계란인양 홍보하고 있어 품질 차이가 없는 일반란과 등급란 간 가격차이만 더욱 벌어지도록 하고 있는 상황. 불가피하게 계란등급판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농가와 영세 유통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등급제도 마련과 5%의 등급란 때문에 차별 받고 있는 95% 계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2.9.20).

※ 본 자료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의 “자치단체 채무 현황” 자료와 Agendanet에서 발간한 “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지표 설명

- (자치단체 채무)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 주요 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02년 17조 900억 원에서 2004년 16조 9,500억 원까지 감소함.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이 대폭 허용되면서 지자체 부채는 2009년 25조 5,50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8조 1,600억 원에 육박**
 - ※ 전국 자치단체 부채 추이(조 원): '02(17.1) → '07(18.2) → '11(28.2), 연평균 5.7% 증가
-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채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전체적인 채무규모는 2010년을 고점으로 하향 추세**
- GDP대비 전국 자치단체 부채 비중은 2.0~2.5% 수준 유지
 - ※ GDP대비 전국 자치단체 부채 비중 추이(%): '02(2.5) → '07(2.1) → '11(2.3)
- **시도(광역시) 자치단체 지방채 잔액**은 2011년 19조 7,400억 원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6.9%씩 증가 추세**

※ 시도(광역시) 자치단체 부채 추이(조 원): '02(10.8) → '07(12.0) → '11(19.7),
연평균 6.9% 증가

-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대비 시도(광역시) 자치단체의 부채 비중은 2002년 63.1%에서 **2011년 70.1%로 증가 추세**

※ GDP대비 전국 자치단체 부채 비중 추이(%): '02(63.1) → '07(65.7) → '11(70.1)

- **시군구(기초) 자치단체 지방채 잔액**은 2002년 6조 3,000억 원에서 2011년 8조 4,200억 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나타냄.

※ 시군구(기초) 자치단체 부채 추이(조 원): '02(6.3) → '07(6.3) → '11(8.4),
연평균 3.3% 증가

-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대비 시군구(기초) 자치단체의 부채 비중은 2011년 29.9%로 **2002년 이후 감소 추세**

※ GDP대비 전국 자치단체 부채 비중 추이(%): '02(36.9) → '07(34.3) → '11(29.9)

<자치단체 채무 현황>

단위: 백억 원,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연평균 증가율
자치단체 채무		1,709	1,653	1,695	1,745	1,744	1,821	1,905	2,555	2,899	2,816	5.7
GDP대비 비중		2.5	2.3	2.1	2.1	2.1	2.1	2	2	2.5	2.3	-
시도 (광역시)	금액	1,079	1,053	1,042	1,081	1,113	1,196	1,297	1,771	2,044	1,974	6.9
	비중	63.1	63.7	61.5	61.9	63.8	65.7	68.1	69.3	70.5	70.1	-
시군구 (기초)	금액	630	599	652	664	631	625	608	784	855	842	3.3
	비중	36.9	36.3	38.5	38.1	36.2	34.3	31.9	30.7	29.5	29.9	-

자료: e-나라지표(자치단체 채무 현황)

- 한편, 행안부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2012.4, '11년 말 기준), **태백시와 경기 시흥시의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곳으로는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선정
-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57곳으로 파악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